

항공업계 '무급휴직' 시작... '고금리' 기안기금 신청 고심

<7%+α>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LCC, 무급휴직 고용지원금 받아
올·내년 지원금으로 6개월 버티기

아시아나, 업계유일 기안기금 결정
업계 '7%+α' 고금리에 신청 꺼려

유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마지막 생존책마저 다 써버린 항공업계가 결국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차선책으로 여겨졌던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사실상 '고금리'로 인해 항공사들이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LCC 업계, 11월 '무급휴직' 시작... FSC는 '아직'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부분 항공사는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코로나 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에 정부가 그동안 유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지만, 그마저도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지원 기간이 종료되며 결국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어부산을 제외하고, 전 항공사가 이달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어부산은 오는 11일까지 유급 휴직을 하고, 이후



대한항공 항공기.

무급휴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내달 15일, 이달 초까지 지원 기간이 남아 무급휴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항공사들의 경영난은 심각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닉트에 따르면 비상장사로서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대한항공 외 전 항공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 화물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흑자

로 전환했지만,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는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도 알 수 없어 올 3, 4분기 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다.

다만 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항공사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항공사들은 일단 올해 말까지 무급휴직을 한 이후

내년 1월 다시 기산되는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또한 6개월을 버티겠다는 전략이다.

◆논란의 기안기금 '고금리'... 대한·제주 "협의 중"

일부 항공사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끝나자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눈을 돌렸다.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인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추후 갚아야 하는 기안기금은 그간 항공사들에 차선책으로 여겨져왔다. 이에 지난 5월 28일 약 40조 원 규모로 공식 출범해 7월 7일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신청을 받았지만, 4개월여가 된 현재까지 최종 자금 지원이 결정된 곳은 아시아나항공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달 11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인수합병)가 무산되고, 기안기금으로 2조 4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기안기금은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LCC는 신청도 불가능하다. 그러나마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조만간 기안기금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약 1조 원, 제주항공은 약 1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사의 기안기금 신청은 당초 알려진 시점보다 점차 늦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중으로 신청하고, 제주항공은 이르면 지난달 15일 KDB 산업은행 산하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전히 양사는 기안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안기금의 고금리로 인해 최종 기안기금 신청을 고심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유일하게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아시아나항공도 대출 금리가 연 7%+α(일파) 수준으로 결정되며, 연 이자만 16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청은 협의가 다 끝나고, 그 다음 단계다. 아직 (산업은행과) 협의 중이다. 세부 조건이나 지원 조건에 맞는지 여부 등을 협의 및 조사해야 한다. 그게 다 끝나면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청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을 갖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부동산시장 '물건 부족'에 상승세 전망

>> 1면 '뉴메트로 5주년...' 서 계속

"정부의 유동성 축소 등 대책에도 가격상승 혹은 보합세 유지할 것" 일부 시장하락 등 변동성 전망도

일부에선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아파트값이 실물경기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을 구매할 때 최근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곳이나 캡투자(전세 끼고 구매) 수요가 많았던 곳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고 아파트값 고점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투자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줄어 들어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중 민간보유 현금과 정기 예·적금 등 단기 저축성예금이 풍부한데 반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터지면서 사모펀드 같은 금융상품의 사기 및 부실관리가 불거지며 부동산과 달리·금·주식 같은 특정 자산에만 돈이 몰리는 현상이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며 "당분간 주택 가격은 강보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지원센터 부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주택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규제하거나 신용대출을 줄이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미 보유 세가 많이 올라가 부동산 거래가 위축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가격 상승 혹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 매물, 집값 '분수령'

고가아파트가 포진한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다 해도 보금자리를 찾는 수요를 막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 수요는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경기도 김포, 파주 등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물건 부족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6·17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음에도 가격은 쉽게 꺼이지 않고 있다"라며 "수요가 줄었다고 해도 거래가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매물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인상에 의한 세금 부담으로 내년 6월부터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3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준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내년에 보유세가 최대 6% 까지 오르고,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등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다주택자들의 향후 행보가 집값 안정의 행방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53.6%, 공동주택은 69% 수준이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 포인트씩 올린다. 또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주택은 2027년,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정연우 기자 ywj964@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3→5단계 세분화

중대본, 거리두기 개편방안 공개
해외사례 비교 격상기준도 상향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초기보다 의료체계 역량이 강화됐다고 판단,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도 유동 지역 기준은 초기 의료역량에 맞추어 지난치에 낮은 기준"이라며 "주요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 1·2·3단계로

운영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등 5단계로 세분화된다.

단계 격상 기준도 상향된다. 중대본은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확충으로 통상적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역량에 맞추어 지난치에 낮은 기준"이라며 "주요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독일은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시 국내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조치

를 시행한다. 이는 국내 기준 전국 2500명 이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 까지는 확충된 중증환자 병상 여력과 유행의 주간 증가 양상을 고려해 단계 기준을 지역별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준 지표에는 일일 확진자 수 뿐 아니라 중환자실 병상 여력도 포함시킨다.

우선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학조사 역량 ▲집단 감염 발생 양상 등의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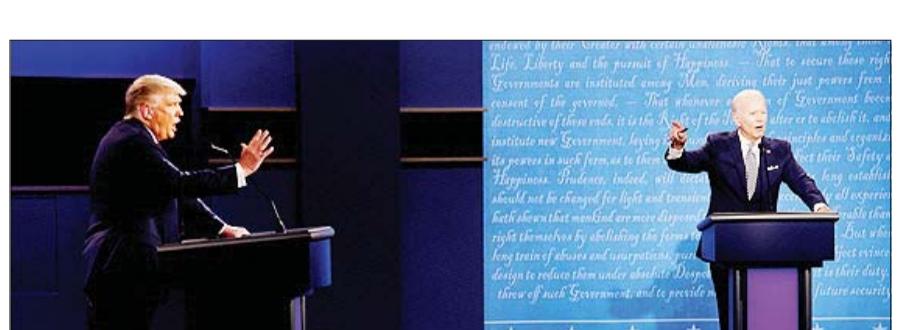
코트라 "美 대선 관계없이 자유무역주의 회기 어려울 것"

미 대선에 따른 경제·통상 방향 분석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트라(KOTRA)가 현지 네트워크를 동원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방향을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 노선을 점검하고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크게 '추가 감세·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급'으로 압축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월 29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왼쪽),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토론회 모습.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난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응 미숙, 국제질서 혼란 가중 등을 비판하면서 '변화할 미국'을 부각하고 있다.

코트라는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든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상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은 당선자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중국 경제로 인한 한국의 반사이익과 인프라 투자 확대·자국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 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기회로 인이 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